

미·중 기후변화 공방에 탄소중립 '암운'

탄소배출 1, 2위 악당국가 중·러 반대로 시한 설정 실패 EU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포

탄소배출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넷 제로) 목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대부분의 참가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중립 목표 시한을 설정하는 등 동참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앞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이라는 모호한 목표 시한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COP26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시한 설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획기적인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것처럼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으로 억제하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현 대응 수준으로는 최소 2.7℃ 상승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과 3, 4위인 인도, 러시아의 동참과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COP26 대면 회의에 불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신했고 시 주석은 짤막한 서면 인사말로 대체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는 2060년을 고수했다. 심지어 인도는 이보다 더 늦은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런 탄소배출 '악당 국가' 간의 입장 차이로 기후변화 대책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선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COP26에서 탄소배출에 명확한 가격을 매기자고 제의하고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을 실현할 강력한 틀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엔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더 올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역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를 줄이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끌어내려 탄소중립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환경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공개했다. 또 이 같은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유럽기후법을 제정했다.

극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EU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이는 2019년 달성한 20% 수준보다 배가 높고 당초 목표치인 32%를 상향한 것이다.

또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그레인지머스에 있는 석유화학기업 이네오스(INEOS)의 정유시설 및 석유화학 센터 앞에서 머리에 기름통을 쓴 한 환경단체 회원이 가짜 기름을 내뿜으며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의 '하트퍼드 병원'에서 8살 어린이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미, 5~11세 어린이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바이든 "팬데믹과의 전쟁 전환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일(현지시간) 5~11세 어린이들에게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전문위원회(ACIP)가 화이자 백신을 5~11세 어린이에게 맞히라고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에선 5~11세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모든 규제 절차가 마무리돼 바로 이 연령대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힐 수 있게 됐다. CDC는 "우리는 이제 백신(접종) 권고를 미국 내 2800여 만명의 이 연령대 집단으로 확대하고, 의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월렌스키 국장은 "(나 역시) 엄마로서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부모들은 이 백신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소아과 의사나 보건교사, 동네 약사와 상담하라고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CDC의 최종 승인이 나온 뒤 이번 결정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정은 부모들이 수개월간 자녀를 격정해온 것을 끝내게 하고, 어린이들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정도를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오는 8일부터 어린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전면 가동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CIP도 이날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14 대 0의 만장일치로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그동안 5~11세 어린이에게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이를 토대로 CDC는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다만 이 연령대 어린이에게는 성인 투약분의 3분 1인 10μg(마이크로그램)의 화이자 백신을 3주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맞게 된다.

화이자 측은 이날 백신 접종에 따른 열 등의 부작용이 5~11세 어린이에게는 16~25세 청소년·성인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스니아 내전 악몽 되살아나나...세르비아계 분리 움직임

통치자 도디크, 연방정부 탈퇴 공언 미국·유럽 무력분쟁 재발 예의주시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반도 보스니아에서 다시 민족 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세르비아계가 분리·독립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보스니아 내전 종식(1992~1995) 이후 26년간 이어져 온 '불안한 평화'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그 불씨는 보스니아 연방에 속한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RS)의 지도자인 밀로라드 도디크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RS 영토 내에서 연방 정부기관의 권한을 정지하고 독자적인 행정기관과 사법부·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새 정부 수립에

준하는 분리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RS를 통치한 도디크는 그동안 지속해서 RS의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그는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미국·유럽 등 외세에 의해 이식된 것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실패한 모델이라는 주장을 폈었다.

보스니아는 보스니아계(이슬람교)와 크로아티아계(기독교)가 지배하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세르비아계(정교회) 스릅스카 공화국이 2체제 국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각 민족을 대표하는 3인의 대통령 위원회 통솔하는 중앙정부와 연방의회가 존재한다. 도디크는 보스니아계의 대통령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체제 구조는 1992~1995년 10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 참혹한 내전에 중지부를 찍

은 미국·유럽 주도의 '데이턴 평화협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또 다른 분쟁 예방을 위해 민족 분포를 기준으로 지배 체제를 나누되 하나의 국가 형태는 유지하려는 시도였다.

도디크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 7월 연방 검찰이 보스니아 내전 당시 저질러진 인종청소 등 세르비아계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세르비아계 민족 감정을 자극한 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도디크는 이러한 조치가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보스니아에 상주하며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 고등대표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미국·유럽 등 서방권은 도디크의 분리주의적 움직임을 우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탈레반, 자국 내 외화사용 전면금지

외신 "경제혼란 심화" 우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자국 내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국내 상거래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이는 법적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국익의 측면에서 상인, 무역업자 등 모든 아프간인은 국내 거래 때 아프간 통화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 도입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간 아프간 내에서는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화폐인 루피와 미국 달러가 널리 통용됐다. 와중에 현지 경제 불안이 심화하고 아프간 화폐인 아프가니의 가치가 떨어지

자 외화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탈레반 당국의 이번 조치가 이미 허약해진 현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현지 경제에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레반은 지난 8월 20년 만의 재집권을 통해 오랜 내전을 끝냈지만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등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의 외화 90억 달러(10조6000억원) 이상이 동결된 데다 국제사회의 원조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가뭄, 기근, 물가 폭등, 실업자 폭증 등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24일 긴급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린이 등 수백만 명의 아프간 국민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